

## 우리나라의 현주소



### 1960년대 - 절대적 빈곤기>

한국전쟁의 결과,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 변변한 사회기반시설 하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. 수많은 고아와 빈민들이 당장 하루 벌어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절대적인 빈곤의 시기였습니다.

### 1970~1980년대 - 개발중심 경제성장기>

경제성장을 지상과제로 하는 국가 재건의 시기입니다. 국가발전계획은 경제성장위주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고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발전의 주축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. 그 결과,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문화·사회·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들도 누적되었습니다.

### 1990년대 - 환경문제 각성기>

- 대규모 환경오염사건 등장

그 동안의 양적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대규모 오염 사건으로 부각되면서 환경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. 1990년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이 검출된 데 이어, 1991년에는 두 차례에 걸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으로 전국민들에게 환경문제가 이슈로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.

#### 알아봅시다!

트리할로메탄 : 하천을 소독하여 수돗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하천에 포함된 마른 잎등에 포함된 유기물의 하나인 휴민질과 소독제인 염소가 반응해 만들어지는 물질로 암을 일으킬 뿐 아니라 세포의 유전자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수돗물에 트리할로메탄의 함유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
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: 구미의 두산전자의 페놀원액이 파이프에서 새어나가 낙동강으로 유입되어 대구~부산 간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는 등의 피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.

- 환경운동의 시작

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통해 확산된 세계적 규모의 환경운동 조류는 우리나라에서도 시민 환경운동의 지평을 여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. 이 후, 폐기물 소각장 건설 반대운동,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,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 등 본격적인 환경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.

- 제도적인 변화

1991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면서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. 1994년에는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되어 환경행정의 위상이 제고되었습니다.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‘의제21’을 작성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‘거버넌스’

의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

**알아봅시다!**

의제21 :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환경 보전을 위한 기본적인 ‘리우선언’의 실천계획입니다. 각종 사회, 경제적인 지구환경문제의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과 이를 위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 광범위한 이행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비록 국제협약과 같은 구속력은 없지만 각 나라 스스로 경제개발과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룬 경제개발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
거버넌스(governance) : 국가와 시장체제와는 다르게 시민사회 안에 존재하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이며 상호협력적인 새로운 형태의 조정양식을 의미합니다.

**2000년대 - 지속가능발전의 태동기>**

● 우리나라 환경지수

국제적인 평가지표들이 개발되면서 국가별 환경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우리나라는 GDP 세계 11위의 경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지속성지수는 2002년 142개국 중 136위, 2005년에는 146개국 중 122위에 불과하였습니다. 소득수준이 높으면서도 환경지속성지수가 최하위 수준인 나라로 기록되면서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개발을 강조하고 환경문제에 소홀하였던 결과가 국제적인 평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. 그 동안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던 우리나라로서는 새로운 가치적립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이었습니다.

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

2000년 6월 정부는 「새천년 국가환경비전」을 선언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. 이 선언의 후속조치로 2000년 9월에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.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출범은 그 동안 명확한 주체 없이 수립, 추진되었던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총괄하여 맡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. 즉, 법령에 의거하여 체계적인 대응과 준비를 할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. 이로써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은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논의와 실천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를 계기로 시민단체와 학계,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꾸준히 제기했습니다.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인 근거 부재로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무분별한 개발논리를 막을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 결국,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2007년 8월의 공포를 거쳐 2008년 2월 시행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.

<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요 역할>

	출범시기	주요 역할
1기	2000년 9월	- 「의제21 국가실천계획」 보완 - ‘10개 정책분야별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’을 장기 정책과제로 선정
2기	2002년 10월	- ‘10개 정책분야별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’에 사회분야를 추가하고 경제, 환경분야 전략을 포괄적으로 발전
3기	2003년 12월	- 국정과제위원회로서의 기능 추가 부여

		- 갈등조정기능 추가 부여
4기	2006년 5월	- ‘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’ 확정 - 77개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선정 및 확정

**알아봅시다!**

새천년 국가환경비전 : 2000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정부가 선언한 환경부문 국가목표입니다

- 선언 내용 :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“자원이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생산량을 극대화하며, 환경이 주는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고루 누리는 삶의 질 높은 정의사회”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

- 원칙 : 「새천년 국가환경비전」에는 공식적으로 사전예방의 원칙 등을 정부 정책의 원칙으로 선포하였습니다.

- 후속 조치 : 이 선언으로 2000년 9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발전이 제도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